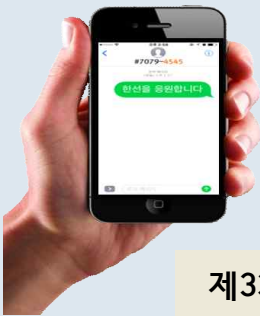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청년을 위한 미래 구상: 코로나19 이후
[발제자] 김원식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
[일 시] 2020년 05월 14일(목) 오전 10시
▶ 온라인 You Tube 영상



☒ 문자 후원
#7079-4545

제337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한국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와 대량실업,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청년 실업률은 2020년 3월 기준 9.9%, 청년체감실업률은 23.1%(2019)에 이른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청년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청년들은 결혼, 출산, 주택을 포기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부채 폭탄과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도 근로 기득권은 청년들의 유입을 배제하고 있어 청년들은 설 곳을 잃고 있다. 청년과 중년의 세대 간 갈등 문제와 빈곤의 세습화로 인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 청년 정책은 책임 있는 독립적 청년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비전, 생애 계획 중심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업성장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완화와 신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취업 시장에서 저연령 구직자를 우대하여 실업 청년의 고령화를 방지해야 한다. 청년 정책의 구조를 취업, 결혼, 출산, 보육, 교육의 전체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 또한, 고령화에 치중된 정책을 개선하여 노령인구가 경제적으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 계층 간 갈등과 청년위기

- ◆ 현대는 5G가 일반화되고 ICT(정보통신기술)가 급속도로 발달한 High-speed Quantum-Jump(HQ) 사회다.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첨단 기자재들과 접촉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단계를 뛰어넘는 ‘도약’이 일상화되고 있다.
- ◆ 한국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와 대량실업,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분배, 환경, 안전 등의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 ◆ 1% 이하의 저성장과 장기 대량실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코로나까지 겹쳐 실업자는 2020년 3월 기준 486만 5천 명에 이른다. 청년들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고 근로 기득권은 청년들의 유입을 배제(exclusion)하고 있다. 더욱이 저성장 에 따른 양극화 심화로 근로계층 간 갈등과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복지 정책으로 복지서비스의 양극화까지 발생하고 있다.

◆ 청년 문제의 현황

- ◆ 현재의 청년들은 과거와 달리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훨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상당히 국제화된 특징이 있다. 계속되는 저성장 속에 청년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청년과 중년의 세대 간 갈등 문제와 빈곤의 세습화로 양극화 또한 심화 되고 있다.
- ◆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제는 악화되었고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해졌다. 청년 실업률은 2020년 3월 기준 9.9%, 청년체감실업률은 23.1%(2019)에 이른다.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청년들은 결혼, 출산, 주택을 포기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부채 폭탄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 그럼에도 아직 청년 문제를 기성세대 중심의 가치관으로 진단하고 있다. 아픈 청춘이 당연하며 청년 문제는 결국 청년들이 사회적 변화에 부적응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어서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진단과 해결책을 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 과거 청년 문제는 노인 정책과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겼으나 지금 청년 문제는 청년과 기득권 중년 세대 간의 일자리 쟁탈 문제다. 우리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청년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청년 중심의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 세대가 중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갖추도록 힘을 키워주어야 한다.
- ◆ 그러나 현재 정책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청년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낮고 각종 규제와 제도로 인해 청년의 고용 환경은 악화하고 있다.

◆ 청년 정책의 방향

- ◆ 청년 정책은 청년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책임있는 독립적 청년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 비전, 생애계획 중심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 ◆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완화와 신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대안이 된다. 또한,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의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가 청년실업 억제에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 취업 시장에서 저연령 구직자를 우대하여 실업 청년의 고령화를 방지해야 한다.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의 지식이 퇴화하고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정책의 구조를 취업, 결혼, 출산, 보육, 교육의 전체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 코로나 사태 이후를 위한 청년 정책에 혁신이 필요하다. 기성세대는 기득권을 스스로 자제함은 물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해야 한다.
- ◆ 노령인구가 경제적으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고령화에 치중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과 통일 한국의 번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